# "MB 대선공약 '세종시' 왜 뒤집나"

## 與 "4대강 저비용 고효율 사업" 野 "수십조 혈세 낭비"

### ■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여야는 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축소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했다.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공격에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정운찬 성토장'이 됐다.

◇세종시 축소 논란=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와 관련, '원안 내지 원안+알파(α)'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여권의 세종시 축소론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백년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5년 통과된 세종시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충청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하지만 통일한국,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행정도시 추진은 명백한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도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된 사업"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너무 미숙하다", " 초보 총리"라는 용어를 써가며 정 총리의 세종시 행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별개 공약인데 세종시 축소·변질을 추진, 균형발전과 과학발전 모두 잃을지 우려된다"며 "세종시 문제를 정략적 재물로 삼거나 정치상품화해서는 안 된다"고 세종시 축소 불가론을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세종시 원점 재검토 음모의 감독은 이명박 대통령, 배우는 정운찬 총리이며, 한나라당은 지나가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4대강 살리기=한나라당은 물문제 해결,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고 찬양론을 편데 반해 민주당은 수십조원의 사업비를 잡아먹는 대규모 토목 공사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유엔환경계획(UNEP)은 4대강 사업을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칭송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살리기,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부겸 의원은 "4대강 본사업비 22조원으로 88만원 세대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혈세 수조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의 도덕성 추궁=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를 통해 정 총리가 교수 시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한국신용평가정보 사외이사, 예금보험공사 자문역, 일본기업의 이사 등을 맡아 영리활동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한차례 사외이사나 고문직을 겸직한 총리.장관 후보가 줄줄이 낙마했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바꾸는 정부의 조령모개식 잣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사실보다는 기존에 밝혀진 내용을 열거하는데 그쳐 폭발력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언론악법 책임 국회의장 사퇴 촉구**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한나라당 규탄 및 국회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개헌하려면 1년 안에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을 한다면 앞으로 1년 안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개헌 문제는 정파를 초월해 접근할 문제이긴 하지만 정치일정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져 오면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은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해 더 깊이 고민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 정총리가 밝힌 세종시 윤곽

## "행정기관보다 기업위주 도시 추구"

정운찬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세종시 수정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여권은 73㎢(2천200만평)의 부지에 들어설 세종시가 현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자족기능이 의문시되는 데다 행정 비효율 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세종시 수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세종시 대안은 국가경쟁력, 통일이후 국가 미래, 해당 지역 발전 등 '3대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것이다.

또한 녹색도시, 과학·지식도시, 산업도시 등의 '3대 개념' 아래 대안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기존의 '행정' 대신 '과학·지식·교육·산업'으로 성격이 변경될 전망이다. 이는 세종시로 내려갈 행정부처의 축소 내지 백지화로 연결된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 행정부처 이전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존 9부2처2청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초기 강력한 인구유입과 고용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전 대상 기업으로 '유수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녹색산업의 이미지에 맞는 LG생명공학 본사 및 공장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기업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상당한 지역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전 대상) 기업을 굴뚝을 가진 기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첨단기업이 올 수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그는 "적어도 2~3개의 대학이 올 것"이라며 세종시에의 대학 유치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대학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총리실은 서울대 공대 제2캠퍼스, 서울대 병원 및 연구소, 이화여대 분교, KAIST 의과학대학원 등의 유치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상대로라면 세종시의 자족기능 부지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우윤근 의원 여당에 칭찬받은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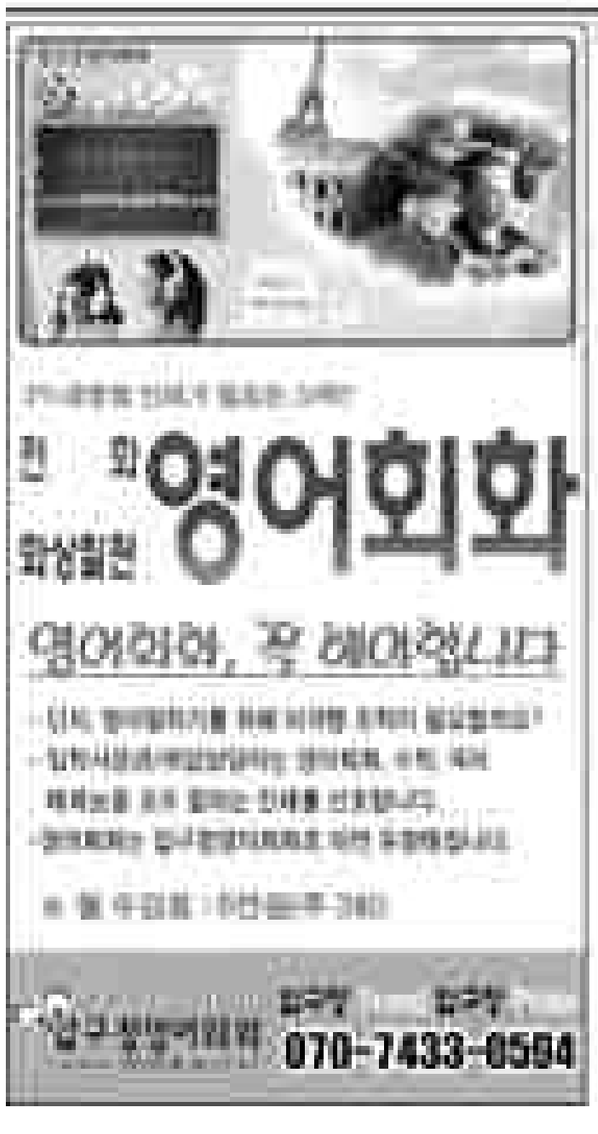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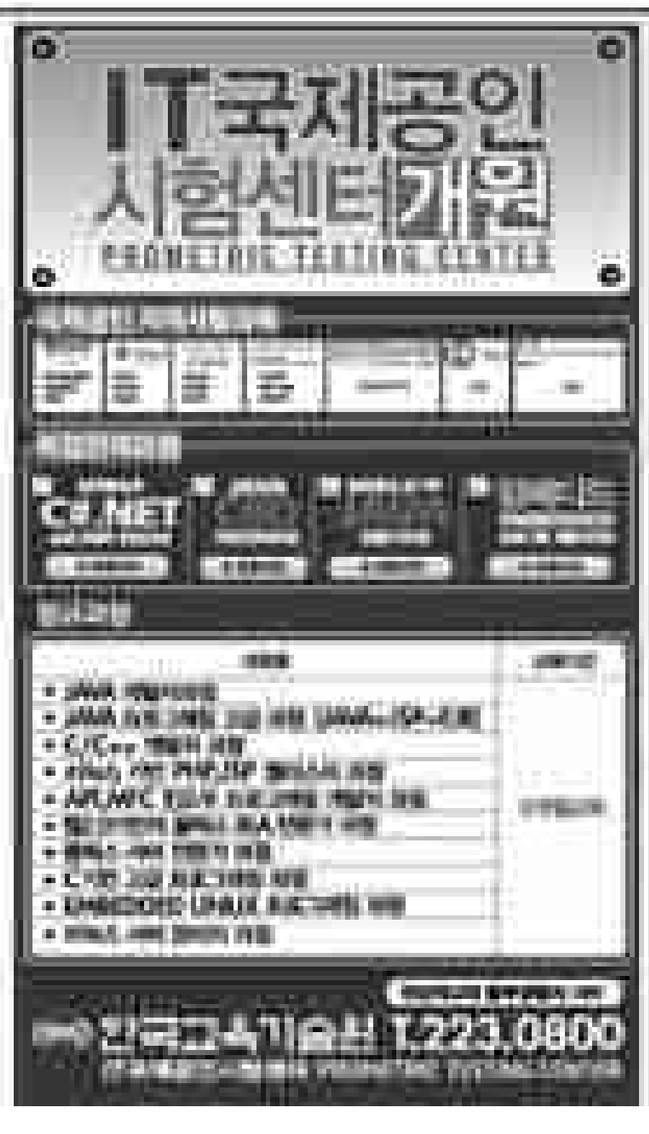
### 이주영 의원 "저서에 개헌론 대안 제시 감동"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우윤근〈사진〉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극찬,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5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 수석부대표가 최근 출간한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 여의도 정치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의 책을 보이며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윤근 의원님이 쓰신 책을 오늘 들고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며 '개헌 논의는 국가백년대계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넘어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권력구조 개편 등 여러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는 책의 일부 구절을 읽었다.

그는 나아가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하신 우 의원님의 신념과 비장한 각오가 녹아 있어서 밤 새워 읽으며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고 극찬했다.

우 의원은 이 저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혼합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